

중국지역정책의 변화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천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999년 이후,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부대개발전략, 동북지구 구공업기지진흥전략, 중부지구 굴기(崛起)촉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10년 장기구상인 ‘국가급 지역발전계획’과, 집행계획으로 ‘국가, 성·시·구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이 주도하여 집행하고 있음
-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4 + 2 지역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 4는 서부, 동북, 중부, 동부의 4대 지역들에 따라 통합적 전략계획을 수립
 - 2는 주체기능구와 핵심문제지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규제·지원정책을 추진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 1 중국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주택 및 건설부문에서의 개발수요 확대를 국내 관련부문·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로 활용
- 2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 지역별 발전정책에 대응한 맞춤형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
- 3 중국동북지구의 진흥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개방정책 또한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에 대한 참여확대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
- 4 향후 중국고속철도와 한반도고속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중국내륙 중서부지구와의 직접교류 확대에 대비한 장기구상 마련이 필요

I. 중국지역정책의 변천과정

- 중국의 지역정책은 서부진출의 균등발전단계, 동부위주의 불균형발전단계, 중서부에 관심을 갖는 지역균형발전 태동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면실시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1. 서부진출의 균등발전단계(1949~1978년)

- 개혁개방 이전은 균등발전 사조의 영향으로 1차5개년계획(이후 ‘1·5계획’)기간(1953~1957년)과 3선건설¹⁾(三线建设 1964~1978년) 기간에 두 차례 대규모 서부진출이 이루어짐
- 3·5계획(1966~1970년)과 4·5계획(1971~1975년)은 미국의 월남파병(1964년)으로 인해 중·소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준비 위주인 3선지구 건설을 중점방향으로 설정

2. 동부지향의 불균형발전단계(1979~90년)

- 개혁개방 이후는 불균형 발전사조의 영향을 받아 효율과 목표가 강조되어 투자여건이 양호한 동부연해지구로 편중되고, 낙후지구·소수민족지구에는 일정한 보상을 부여
- 7·5계획(1986~1990년)에서 전국을 동부, 중부, 서부의 3대 경제지대(三大经济带)로 구분, 동부연해지대 발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중부지대에는 에너지·원재료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서부지대 개발을 적극적으로 준비

3. 지역균형발전전략 시동단계(1991~98년)

- 1990년대 초 개혁개방 심화로 동서 간 지역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방침을 확립하여 창강연안(沿长江)도시, 내륙국경세관도시, 성회도시(省의 수도)를 우선 대외개방하고, 중·서부지구의 농촌소기업(乡镇企业)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정책결정을 함
- 1992년 덩샤오핑의 남방담화(南方谈话) 이래 연해지구의 대외개방을 강화하면서 중서부지구의 대외개방 일정을 점차 가속화

1) 3선건설은 중국정부가 1964년부터 중·서부 13개 성·자치구에 전쟁준비를 위하여 대규모의 국방, 과학기술, 공업 및 교통기반시설을 건설한 것인데, 이는 미국의 월남파병(1964년)으로 중·소관계 악화와 미국의 중국동남연해에 대한 공세로 인해 비롯되었으며, 중국경제사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업이전과정임.

- 연해지구에 상하이와이가오차오(上海外高桥), 텐진항(天津港), 선전푸텐(深圳福田) 등 15개 보세구(保税区)를 설립하여 연해경제개방구의 범위를 더욱 확대
- 국경주변 세관도시, 창강 연안도시, 내륙 성회도시를 대외개방하고, 쑤샤경제개방구(三峡经济开放区)를 설립하며, 중서부지구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

- 중서부지구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중서부지구 투자비중을 증대하고, 동부연해지구의 가공제조업을 점차 중서부 자원지구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4. 지역균형발전전략 전면실시단계(1999년 이후)

【그림 1】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전개과정



자료: 중국국가측량국 개혁개방30주년기념 홈페이지.

- 1999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전략, 동북지구 구공업기지진흥전략, 중부지구 굴기촉진전략을 수립·실시하고,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추진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전략 전면실시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

- 11·5계획(2006~2010년)에서 서부대개발, 동북지구 구공업기지진흥, 중부지구 굴기촉진, 동부연

해지구 우선발전 등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주체기능위상 명료화, 동·중·서부의 상호교류, 주민 생활수준 격차 축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구도의 점진적 형성을 제시

● 서부대개발전략 실시(1999년)

-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정책조치에 관한 통지」(2000년), 「서부대개발 정책조치에 관한 실시의견」(2001),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2004), 「서부지구 특색 우위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2006), 「국무원의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서부지구경제의 안정적 발전유지에 관한 의견」(2009) 등이 공표·시행됨

- 「서부지구인재개발10년계획」(2002년), 「서부대개발 11·5계획」(2007),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 경제구 발전계획」(2008), 「관중-텐쉐이(关中-天水) 경제구 발전계획」(2009)을 비준

- 2000~2010년간 서부대개발에서 착공한 중점사업은 143개 항목으로, 투자총액이 2조 9천억 위엔(약 522조 원)에 달함

● 동북지구 구공업기지 진흥(2002)

- 「동북지구 구공업기지진흥전략에 관한 의견」(2003년)을 발표하여 구공업기지의 조정·개조·발전과 신산업기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극으로의 육성을 제안
- 2007년 「동북지구진흥계획」을 비준하고, 2009년 「랴오닝연해경제벨트계획」과 「중국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 강령-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발표

- 동북지구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가 투자, 재정세무, 금융, 국유기업개혁, 사회보장사업, 자원형도시전환시범사업, 대외개방, 기반시설 등의 부문에서 관련조치를 제정·실시

● 중부지구굴기 촉진(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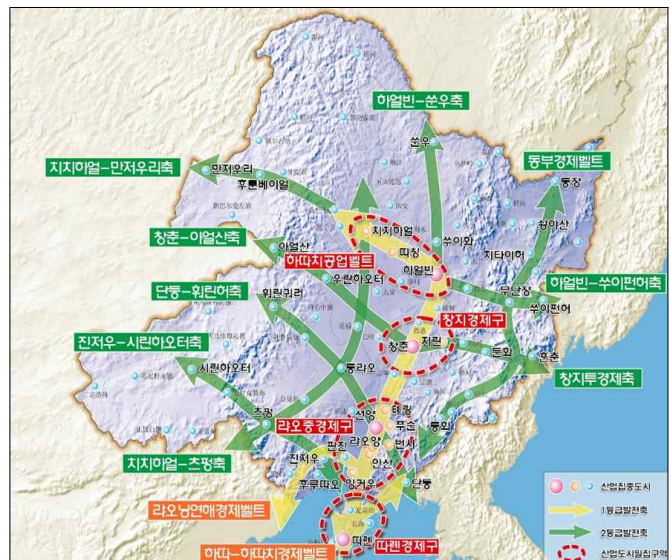
- 2006년 중부지구를 전국의 중요한 3기지 1거점(국가식량생산기지, 에너지원재료기지, 현대장비제조·고급기술산업기지, 종합운송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

[그림 2] 중국 서부대개발 발전구상



자료: 중국국가측량국 개혁개방30주년기념 홈페이지.

[그림 3] 중국 동북지구진흥 발전구상



자료: 중국국가측량국 홈페이지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2007년에 우한(武汉)도시권과 창주탄(长株潭)도시권을 전국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건설 종합관련개혁시범구로 비준
- 2009년에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과 「퉁양호(鄱阳湖)생태경제구계획」을 비준하고, 2010년에 「완장도시벨트(皖江城市带)산업이전승계시범구계획」을 비준

● 동부연해지구 우선발전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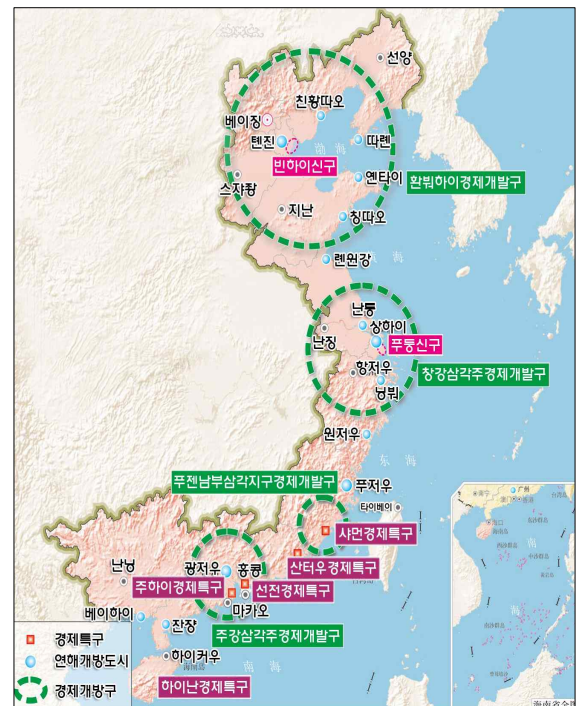
- 2003년 이래, 상하이와이가오차오·칭따오·파렌·닝뱌·장자강·샤먼샹위·선전옌톈항·톈진보세구의 지역항만연계시범사업 시행 비준
- 2005년, 상하이푸둥신구(上海浦东新区)를 전국종합관련개혁시범지역으로 비준하고 상하이양산(上海洋山)보세항만을 설립
- 2006년, 톈진빈하이신구(天津滨海新区)를 전국종합관련개혁시범지역으로 비준하고 톈진둥장(天津东疆)보세항만을 설립
- 2008년, 「창강삼각주지구 개혁개방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주강삼각주개혁발전계획강령」 비준으로 주삼각지구 발전에 자주권 부여
- 2009년, 중관촌(中关村)과학기술단지를 지원하는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을 비준
 - 5월, 「푸젠성의 해협서안경제구의 건설 가속화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 6월, 「장쑤(江苏)연해지구발전계획」과 「형진(横琴)종합발전계획」을 비준

【그림 1】 중국 중부지구굴기 발전구상



자료: 중국국가측량국 개혁개방30주년기념 홈페이지.

【그림 2】 중국 동부연해지구 발전구상



자료: 중국국가측량국 개혁개방30주년기념 홈페이지.

II. 중국의 지역발전 추세변화와 지역정책의 문제점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추세변화

●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투자증가 가속화

- 최근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현저히 가속화
 - 2001~2009년간 동북, 중부, 서부지구의 사회고정자산투자가 각각 연평균 27.4%, 27.5%, 26.1%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및 동부연해지구 투자증가 속도보다 높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투자의 북상서진(北上西进)²⁾ 추세가 나타남
 - 1999~2004년간, 중부지구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국의 7.5%에서 9.3%, 동북지구는 4.1%에서 9.0%로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동부지구에서 중부와 동북지구로 전이

● 산업배치가 집중에서 확산으로 전환

- 1980년 이후, 중국의 경제·산업활동은 경제가 발달된 동부연해지구로 집중되어왔음
 - 1980~2006년간, 동부지구 GRP가 전국의 43.6%에서 55.7%로 12.1% 증가하였지만, 동북은 13.7%→8.5%, 중부는 22.3%→18.7%, 서부는 20.4%→17.1%로 하락
- 최근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국 경제활동이 점차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로 전이·확산 중임
 - 2008년 동부연해지구 GRP가 전국의 54.3%로 하락하여 2006년에 비해 1.4%p 감소한 데 비해, 동북, 중부, 서부는 각각 8.6%, 19.3%, 17.8%로 0.1%p, 0.6%p, 0.7%p 증가

● 동서부격차가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

- 개혁개방 이래 상당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불균형성장과 동부연해지구로 전국경제 생산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중국 동·서부지구 간 발전격차도 부단히 확대
 - 이러한 동서격차의 확대는 1978년 이래 시행된 동부편향정책, 동부소수지구로의 외국인투자·수출의 집중, 중국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더욱 가속화됨

2) '북상'은 외국인 투자가 주삼각에서 창삼각을 거쳐 환북하이와 동북지구로 전이되고, '서진'은 외국인투자가 동부연해지구에서 중부지구로 전이된다는 것임.

- 2004년 이후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는 동부연해지구의 1인당 GRP는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중·서부지구는 상승추세이고, 2006년 이후 동북지구도 계속 격상 중
 - 개혁개방 이후 확대되던 동부연해지구와 중·서부지구 간 1인당 GRP의 상대격차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축소되기 시작

중국 지역정책의 문제점

- 개혁개방 이후 중국지역정책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나, 아직도 체제가 완비되지 않고 관련부처의 할거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
 - ① 효율과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각종 경제특구가 과도하게 동부연해지구에 집중
 - ②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등의 전략이 일률적 특혜방식을 채택하여 유형별 발전이념이 구현되지 않아 정책실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
 - ③ 통합된 국가지역정책이 없고, 관련직능이 각 부처(국무원빈곤지원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정부(民政部), 주택·도농건설부, 국토자원부 등)별로 분산됨에 따라 정부지출관련 부처간 협조가 결여되어 국가지역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④ 국가자금 투입을 더 중시하고 민간자본 유인 및 체제기제 혁신을 경시해 왔으나, 향후에는 민간자본과 외국인투자의 대규모 유입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2006년 이후, 4대 지역정책의 기본틀하에서 일부 성·자치구, 창강삼각주, 텐진빈하이신구 등의 특수지역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대일로 흥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지역발전 촉진과 동시에 여러 부정적 효과를 초래
 - ① 국가지역정책체계에 충격 야기: 특정지역의 특혜·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통일된 기준과 준거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 국가지역정책체계 형성을 저해
 - ② 지역정책 수립 시 금전·인맥에 의한 해결을 초래: 지역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의 각종 로비, 금전, 인적관계에 의해 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③ 지역정책의 부실화 초래: 빈곤·낙후지구 등 문제지역을 중점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는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핵심이 부각되지 않음
 - ④ 새로운 불공정문제 야기: 지역정책이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정지구에 대해 정책특혜·지원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타 동종지구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III. 향후 중국지역정책의 전망

미래 중국지역정책의 기본틀

●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4+2 지역발전전략’을 채택

- 4는 전략계획 측면에서 서부, 동북, 중부, 동부의 4대 지역들에 따라 전국경제배치·지역발전에 대하여 통합적 계획수립 및 통일적 배치를 진행
 - 12·5계획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서부대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동북지구를 전면진흥하고, 중부지구굴기를 강력 촉진하며, 동부연해지구의 전환·승급을 적극 지원
 - 동·서부의 내부격차가 큰 것을 감안, 동부연해지구를 동남지구, 창삼각지구, 환취하이지구로, 서부지구는 서남지구, 서북지구로 세분하여 7대 종합경제구 발전구도를 형성
- 2는 정책조정 측면에서 주체기능구와 핵심문제지역의 두 가지 유형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규제·국가지원정책을 실시
 - 자원·환경수용능력, 경제개발밀도, 미래발전 잠재력에 따라 특화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의 주체기능구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리
 - 지역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유형별로 문제지역을 분류하고, 지역특성과 당면문제에 따라 전국차원의 차별화된 국가지역지원정책체계를 시행

향후 중국의 지역발전종합전략

● 서부대개발 심층 추진

※ 서부대개발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사회안정, 취업기회 확대, 시민의 실질혜택 증대를 더욱 중시하며, 서부자체의 발전능력과 종합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안정발전 추진

■ 특화우위산업 발전 가속화

- 에너지·화학공업, 중요광산개발·가공업, 특색농목축업·가공업, 장비제조, 문화관광 등 특색우위산업 발전을 더욱 추진

■ 공간배치특화 강력 추진

- 청위(成渝), 관중-텐쉐이(关中-天水), 베이부완(北部湾)경제구 건설을 지속하고, 란시(兰西), 후바오어(呼包鄂), 텐산베이루(天山北麓), 닝샤옌황(宁夏沿黄), 텐중(滇中), 첸중(黔中) 등 도시군(城市群)계획 수립을 가속화하여 신성장극 형성을 적극 육성

■ 신형개발구도 적극 구축

- 외국인투자, 연해기업, 개발구의 서부진출을 적극 유인하고, 간선교통, 중·대도시, 산업단지에 기반한 국가산업이전승계시범지구를 건립

● 동북지구 전면 진흥

- ※ 동북지구는 낮은 산업단계, 민간경제성장 부족, 서비스업 발전 낙후, 높은 자원소모, 대량의 3폐기물(폐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 배출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
- ※ 12·5계획기간 중 산업진흥과 중점지역을 부각시키며, 국가전략산업기지와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개방전략 전면실시를 가속화하여 동북지구의 전면진흥을 촉진

■ 전실한 산업진흥에 주력

- 동북지구 진흥은 산업진흥이 관건으로서, 기업조정·개조 가속화와 지역 간 기업자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국가선진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재료·에너지보장기지, 국가중요상품식량·농목축업생산기지 건설을 가속화

■ 경제벨트와 도시권의 중점 육성

- 2벨트(랴오닝연해경제벨트, 하얼빈·파렌경제벨트) 4도시권[파렌(大连)도시권, 선양(沈阳)도시권, 창지(昌吉)도시권, 하얼빈(哈尔滨)도시권] 건설에 집중하여 전국적 의의를 갖춘 신성장극 적극 육성

■ 투자중심에서 혁신중심으로 전환

- 동북경제의 쾌속성장은 주로 투자촉진에 의한 것인데, 단일한 투자촉진에서 과학기술·기제체제혁신을 강화하는 혁신중심으로 전환
- 장비제조, 교통운수설비제조, 원재료, 에너지, 의약공업, 현대농업, 고급기술산업 등 중점업종의 혁신능력 강화와 첨단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기업과 지역의 혁신능력을 증강

■ 전면적 개방전략 실시 가속화

- 랴오닝연해경제벨트의 개방·개발추진 가속화, 대통로·국경세관 건설을 기초로 하여 동북국경주변개방벨트 건설, 철도노선주변(沿线)개발 가속화로 동북지구의 연해주변, 국경주변, 철도노선주변의 ‘3연변’ 개방구도를 구축
- 쑤이만경제벨트(绥满经济带) 건설의 적극 추진과 국가계획수립을 확실하게 하여 동북 진흥과 서부대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

● 중부지구 굴기 촉진

- ※ 중부지구는 동부승계·서부연결(承东启西)작용을 하는 중간지역으로서, 우수한 자원·환경 수용능력과 양호한 경제발전 기반으로 미래 농촌인구와 연해산업을 이전승계할 중요지역임
- ※ 향후 3개기지·1개거점 건설의 지속적 수행, 도시군 형성을 핵심으로 한 중점지역의 개발 강화, 공업화·도시화의 추진 가속화 등을 통하여 핵심지구의 우선발전을 촉진

■ 국가 3개기지·1개거점 건설 강화

- 지역화·규모화·집중화된 국가급 상품식량생산기지 건설 가속화
- 석탄, 철광, 비철금속 등 주요광산자원 탐사 강화, 산시의 진북(晋北)·진동(晋东)·진중(晋中), 안후이 양화이(两淮), 허난(河南) 등지의 대형·특대형 석탄기지 건설 추진
- 중·대도시의 장비제조업 산업기반과 과학연구소를 기반으로 자주혁신능력을 증강하여 현대장비제조·첨단기술산업기지를 조성
- 정저우(郑州), 우한(武汉) 등 성회도시를 전국적 교통 및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교통운송거점 건설 가속화

■ 다중심·네트워크 개발전략 시행

- ‘다중심’ 개발: 현대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하고 산업사슬 구축과 생태산업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한 중원(中原)도시권, 우한도시권, 창주탄(长株潭)도시군, 환궈양호(鄱阳湖)도시군, 장화이(江淮)도시군 등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요 성장극으로 육성
- ‘네트워크’ 개발: 창강연변경제벨트, 룽하이(陇海)연변경제벨트, 베이징-광저우철도연변경제벨트, 베이징-홍콩철도연변경제벨트 구축을 가속화하는 2중2횡 네트워크 개발구도를 형성하여 중부경제의 발전을 선도

● 동부연해지구의 전환 · 승급 지원

- ※ 개혁개방 이래, 중국 동부연해지구는 계속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해 왔는데, 특히 주삼각, 창삼각 등 지역이 중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 성장극이었음
- ※ 현재 동부연해지구는 과거의 높은 자원소모, 높은 수출시장 의존도, 낮은 산업사슬에 의한 저임금 · 저비용 · 저가격의 전통적 발전방식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 전환과 산업승급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에 동시에 직면해 있음

■ 전환 · 승급방향 명확화

- 첨단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업을 대폭 발전시켜서 점차 첨단화 방향으로 발전
- 금융서비스, 현대물류, 비즈니스회의 전시, 정보자문, 문화창의 등 현대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여 경제의 서비스화 적극 추진
- 기술혁신과 신상품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산업의 창의성을 높여 ‘동부제조’에서 ‘동부창조’로의 전환을 실현
- 동부 가공무역을 OEM에서 OEM 및 OBM(자가상표부착)으로 전환하여 동부연해경제의 명품화를 실현

■ 여러 부문에서의 전환 · 승급 동시실현

- 자원낭비 · 환경오염 · 낙후설비의 기업 · 제품을 과감하게 조업중단 및 도태
- 조건을 갖춘 기업은 기술개조 · 제품구조조정 · 명품화 강화를 통한 승급을 지원
- 발전잠재력은 있으나 토지 · 자본의 제한을 받는 기업은 주변지역 · 중부지구로 이전을 장려
-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유입 확대를 통해 고급신기술산업과 첨단산업을 적극 유인

■ 도시군의 지속가능발전 촉진

- 최근, 일부 도시군에서 인구 · 산업의 대규모 집적으로 인해 생태환경악화 추세가 나타나는데, 향후에는 동부도시군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이 중요 전략으로 격상될 것임
- 산업진입기준 제고, 단위토지당 투자강도 · 산출효율 · 기술기준 · 친환경기준 포함, 산업퇴출기제 구축으로 산업특화 · 승급을 추진
- 도시군 내 보전용지 30~40% 이상의 보전용지 하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을 규제
- 에너지절약 · 자원소모감소 · 오염배출저감 강력 추진, 토지의 절약적 · 집약적 이용, 생태환경 강화, 녹색생산 · 생활 · 소비방식 시행, 생태기업 · 생태산업 · 생태단지 · 생태경제체계 구축으로 저탄소 · 생태 · 집약발전 촉진

IV. 중국의 지역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10년 장기구상인 ‘국가급 지역발전계획’과 집행계획으로서 ‘국가 및 성·시·구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은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국 지역균형발전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주택 및 건설부문에서의 개발 수요 확대를 국내 관련부문·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 중국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추진 시 국가자금 투입을 중시하고 민간자본 유인을 경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민간자본과 외국인투자의 대규모 유입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중국과의 한·중 FTA 체결 및 각 부문에서의 국가 간 협력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연구가 필요
-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별 발전정책에 부응하는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맞춤형 중국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
 -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극인 동북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에 대하여 각각의 산업정책과 도시군 발전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국 진출 및 현지정착 전략을 마련
- 중국 동북지구진흥정책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개방정책 또한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에 대한 참여확대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
 - 국제협력사업에의 참여는 공공부문의 직접 참여보다는 정치외교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개발은행(가칭)’ 설립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참여전략을 모색할 필요
- 향후 중국고속철도와 한반도고속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중국내륙 중서부지구와의 직접교류 확대에 대비한 장기구상 마련이 필요
 - 중국고속철도와 한반도고속철도의 연결로 중국 내륙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계 및 협력 축진이 기대됨
 - 향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중국 동북지구와 동부연해지구뿐만 아니라 중·서부지구의 주요 도시군과의 교류·연계구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국토계획연구본부 김천규 연구위원(cgkim@krihs.re.kr, 031-380-0199)

● 도면작성 : 국토계획연구본부 김흠 연구원(kimhum@krihs.re.kr, 031-380-0291)